



이미 2단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미국 재정정책

1. 대규모 지원책과 백신 보급의 조합

- 지난 주 1.9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지원 정책이 최종적으로 발효
- 이번 정책에는 4,100억\$ 규모의 개인 현금 지급과 2,460억\$ 규모의 실업급여 확대 등 개인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 비중이 크게 증가
-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에 속하는 미국의 백신 보급과 대규모 현금 지급의 조합은 미국의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가능

2. 다음 단계는 인프라 투자

- 이제 막 바이든의 1차 재정 지출 계획이 통과된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2단계 경제 회복 정책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음
- 과거 정책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전적으로 경기 하방을 방어한 뒤 본격적인 재건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나리오
-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1.5조\$~ 최대 4조\$ 수준의 추산치가 언급되고 있음

3.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 제고

- 지난 해 6월 민주당은 1.5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 마련될 인프라 정책도 이를 골자로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 항목 별로 구분해 보면 교통 부문이나 통신 부문 등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미국 증시 테마 ETF 가운데 인프라 투자 관련 ETF의 아웃 퍼폼과 자금 유입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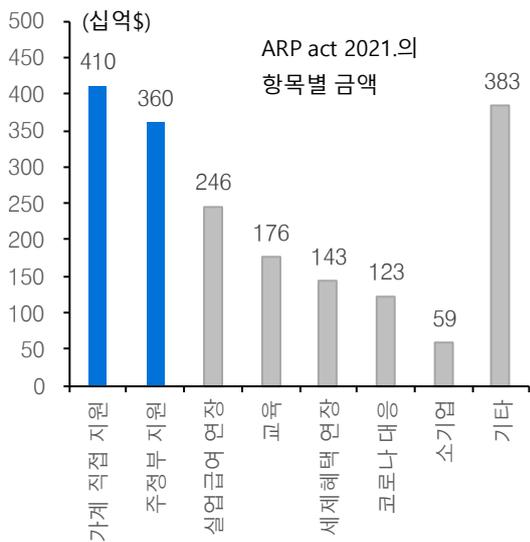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1. 대규모 지원책과 백신 보급의 조합

지난 주 11일 미국 의회에서 1.9조\$에 달하는 American Rescue Plan Act가 상하원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즉시 서명하면서 법안에 포함된 경기 부양책들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개인들에게 최대 1,400\$까지 현금 지급, 9월 6일까지 주 300\$의 실업급여 지급, 세입자 월세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해 코로나 직후 마련했던 대규모 구제 계획인 CAREs Act의 경우 민간 부문 직접 지원이 가계 지원 2,500억\$와 실업급여 2,600억\$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전체 규모는 당시에 비해 작지만 가계 현금 지급에 4,100억\$ 그리고 실업급여 연장에 2,460억\$가 책정되어 민간 부문 지원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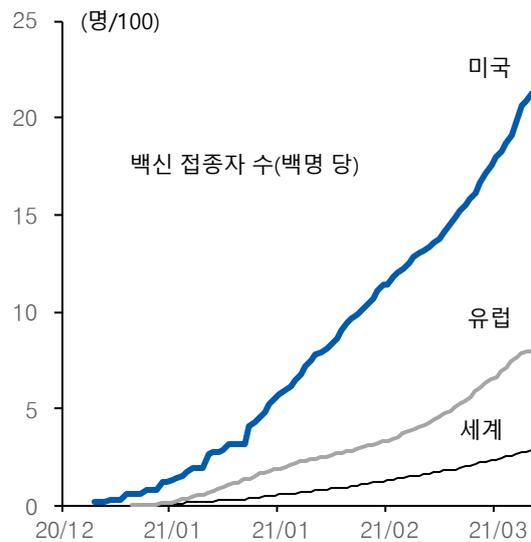
일부 여론 조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들에게 지급된 현금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연결될 지, 소비보다는 저축만 급등 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지, 아니면 소비 쪽으로 유입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아직 확신하기는 힘들다. 다만 미국의 백신 보급 속도가 글로벌 전반적인 보급 속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과 가계 지원 규모의 증가를 동시에 고려해 보면 미국의 내수 소비가 부분 자극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다.

[차트1] 지난 해 CAREs Act. 당시에 비해 현금 지급과 실업급여 등 가계 직접 지원 규모는 오히려 증가



자료: 미 의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유럽이나 전체 글로벌 상황 대비로도 미국의 백신 보급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 중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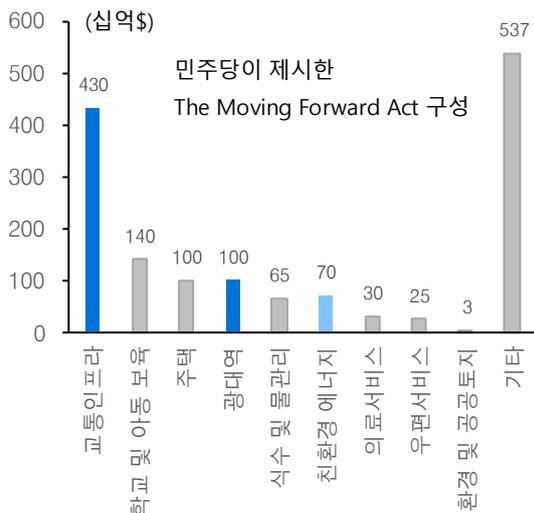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2. 다음 단계는 인프라 투자

대규모 코로나 지원 법안이 막 통과된 상황이지만,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도 그랬듯 경기 하방을 지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만든 뒤 회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인프라 투자, 신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재건 계획이 적용되는 것을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도 취임 전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2 단계로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어 다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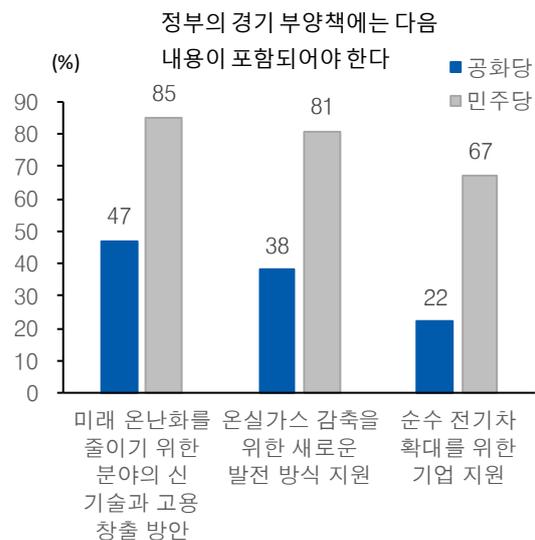
실제로 다음 정책에 대한 뉴스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3/5일에는 바이든이 인프라 공약을 위한 초당파 하원 모임을 개최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옐런 재무장관도 인터뷰를 통해 인프라와 교육, 기후 변화 등이 다음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원 교통/인프라 위원회 위원장이 5월까지 인프라 투자 계획이 상/하원을 통과할 것을 바란다고 언급한 인터뷰 내용도 알려진 바 있다. 준비 중인 재정 지출 계획은 최소 1.5조\$에서 4조\$까지 달할 수 있다는 추정치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성은 가늠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하원 교통/인프라 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지난 해 민주당이 제시하고 하원을 통과했던 인프라 법안인 The Moving Forward Act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법안이 민주당이 발의했던 것인 만큼 전반적인 구성을 참고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차트3] 지난 해 민주당이 제시하고 하원을 통과했던 인프라 투자 법안인 The Moving Forward Act의 주요 내용



자료: 미 하원 교통/인프라 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측은 경기 부양책에 환경 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비중이 높은 상황



자료: RFF,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 제고

차트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교통 인프라나 통신망에 대한 인프라 투자 규모가 크게 책정되어 있다. 바이든 = 친환경이라는 이미지와 사뭇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경기 부양에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검증된 바 있는데다 상당기간 지목되고 있는 바와 같이 노후화 된 미국의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면 1순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프라 투자가 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도 여기 일부 포함된 것 뿐만 아니라, CLEAN Future Act 등을 통해 따로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의회 합의 측면에서도 공화당이 재건 계획에 환경 정책을 포함시키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우선적으로 합의가 쉬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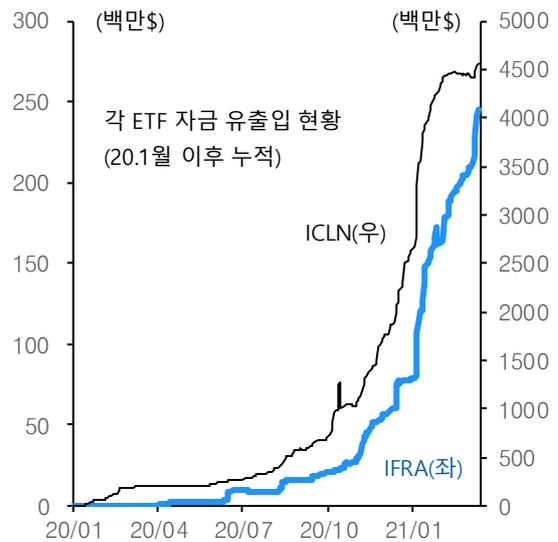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소 관심의 영역에서 떨어져 있던 교통이나 통신 인프라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여지도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을 한 가지 확인해 보면,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였던 친환경 ETF(ICLN)에 대한 자금 유입이 최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프라 테마 ETF(IFRA)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차트5] 지난 해 바이든 수혜주로 각광을 받은 친환경 에너지 테마에 대한 관심이 주춤하는 사이 인프라 테마가 강세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친환경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주춤한 사이 인프라 ETF로 활발한 유입이 진행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